

지 명 토 론

【지명토론자 : 강영호(화성군 산업과)】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공급 방안에 관하여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농업기계학회 관계관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화성군에서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사계장 강영호입니다.

정부지원으로 농기계가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지원사업 신청으로 부터 대상자 확정까지 약 1년이 경과되며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일선 시·군·읍·면·동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농기계 사업 지원 업무중 최일선 행정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시행 요령의 객관성과 사업량의 지역간 형평성 및 기종별 수요대비 공급량 그리고 지원대상 농가의 엄정 선정 및 사용적기 농기계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기계 지원 업무는 중앙에서 기획업무가 이루어지고 지방행정은 정확한 수요파악 및 농기계 사업 시행요령을 준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집행 업무를 추진합니다. 일선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업무 추진 능력에 따라 사업추진 평가가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공무원의 농기계 지원 사업의 숙지와 전문성 있는 경력 공무원 배치, 담당자의 적절한 업무량 부여 등 행정 환경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사업 추진 과정중 일부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행 계획에서 보다는 최일선 담당공무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급 행정 부서에서 최종 처리되는 농정 업무량을 검토해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직원 증원 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업무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도 배려 되어야 무리 없이 농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국비 보조금 확보 계획에 따라 95년 사업계획을 94년 4월에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서 영농 계획을 1년이상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가구가 적어 신청 물량을 진단 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업 물량 배정시에 즉흥적·충동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농가가 대다수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공무원의 고충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량 신청시 부터 농가의 지원체계 인식 부족 및 의식이 낮은 관계로 불확실한 출발로 일선 실무자는 명년도 사업계획을 농기계 공급 추세 기종별 선

호도, 농경지 비례, 농기계 기존 공급량 등을 판단하여 조사 집계된 물량을 조정 보고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농기계 지원 신청량에 의거 증양으로 부터 농기계 공급 물량이 시달되면 농기계 이용조직별 반값 신청자 개인별 신청서를 검토 확인하여 배정물량 대 비 객관적 평가 자료에 의거 이용 조직별, 개인별 배정안 계획을 작성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 심의 확정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과정은 행정 결정 사항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민의 행정 수행이겠지만 농지관리위원의 전문성, 사명감 결여와 군단위 행정의 정확한 수요판단 및 시정 분석 등 심의회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고 업무 성격상 신청 농가를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제약 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 효과보다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바쁜 시기에 소집하여 위원 개인 생활의 불이익 및 실무자의 업무 과중만 초래해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실수요자 대상 및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농가는 지원 1차, 2차년에 대부분 지원을 받아 지원 3차년인 95년 부터 대부분의 소규모 영농가가 무순위로, 선정 기준에 세부적인 사항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인근 농촌 지역은 소규모 농가가 농업이외 취업으로 겸업농이 많이 있습니다. 겸업농가의 경작 면적 상한선을 1ha 이상으로 제한하여 주말이용 소규모 자급 영농을 하는 농가는 제외하는 것도 소형 농기계의 과잉 공급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값 지원 대상자 결정권자는 읍·면·동장으로 선정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신청농가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상자 결정이 어렵고 확정후에도 농업 여건이 비슷하여 탈락 농가의 민원도 발생합니다.

소규모 농가의 여건이 비슷한 영농 조건을 감안해서 반값 실수요자 결정은 마을별로 농기계 보유현황 신청농가수, 경지면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배정 기준을 정하고 마을별 물량 배정후 실수요자 선정 대상 및 우선순위를 통보하여 부락별 신청자 전원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개최, 자율적으로 영농형태 및 농기계 이용율이 높은 농가순으로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탈락농가는 명년도 신청농가로

정리 관리하여 행정의 공개 및 농가 스스로 판단 결정하므로서 무리없는 사업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기계 일반 용자 중단으로 실수요자가 반값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부 사례도 마을별 협의 대상자 결정시 해소되리라 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이후 농기계 수리점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농기계를 수리할 비용이면 반값으로 새로운 기종 구입이 가능하므로 농기계 수리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각있는 농가는 보조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을 농기계 수리에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사용 가능한 농기계는 신규 구입보다 수리후 사용이 농가 이익이 되는 지원 사업이 제시 되어야 자원을 재활용하여 농기계 이용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무를 보면서 평소 느꼈던 업무 내용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명토론자 : 박남종(농업기계화연구소 이용조사과장)】 : 오늘의 토론회 주제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원방안의 모색인데 여기에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기종별로 작업적기 동안에 그 농기계가 지니고 있는 고유 성능을 발휘할 때 소화할 수 있는 작업가능 면적 즉 부담면적에 달하는 면적을 작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농기계의 이용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시산한 바에 의하면 벼농사에서 모내기 작업기간과 동일하게 한정되어 있는 쟁기작업의 부담면적이 8마력 경운기는 6.8ha, 중형의 35마력 트랙터는 15.4ha가 됩니다. 이양작업에 있어서는 보행4조 이양기 11.1ha, 승용6조 이양기 15.8ha이고 수확작업에 있어서는 3조콤바인 17.6ha, 4조콤바인 32.4ha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담면적을 기준할 때 한 농가가 35마력 트랙터, 승용6조 이양기, 3조 콤바인 등 주요기종 1대씩만 보유한다면 15ha의 벼농사는 감당할 수 있는 셈이 되고 또한 대형기종을 투입한다면 20ha 이상도 감당할 수 있는 시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인구는 약 60%가 줄어들었고 총 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율은 70년의 44.7%에서 92년에는 13.1%로 줄었지만 소농구조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농가호당 경지면적 1.2ha에서 4 ~ 5배 수준인 5~6ha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형수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크게 못미치는 소농구조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계화 농업의 요체는 농기계의 이용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가와 이용조직을 중심으로 경지의 소유와 이용의 집적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로 기계화 농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가와 농기계 이용조직에 대한 기계화 지원시책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현행 지원시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업농가나 이용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농가도 영농기계화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농기계의 구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앞으로 전업농가나 이용조직을 희망하는 농가, 겸업농으로 영농을 계속하고자 하는 농가, 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분위탁 또는 완전위탁농으로 존속하고 싶은 농가, 재촌탈농하거나 이농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등 여러 형태의 농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일반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농기계 구입비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보조, 200만원 초과시 100만원 보조지원 시책은 문제점도 없지 않으나 영농의욕이 있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준 점 등 긍정적인 면을 보다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공급시책이 2년째에 접어든 금년은 작년에 비하여 구입대상농가 선정에서 개선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야 할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농가는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농의욕이 있고 농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가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농기계를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시책은 기계화 시책의 일관성과 농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골격은 유지하면서 몇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운기나 트랙터의 본체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보유 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부속작업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랙터용 작업기의 가격은 대략 소형은 40~50만원, 중형은 60~100만원 범위입니다. 작업기는 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기존 보유농기계의 철저한 수리정비로 농기계의 사후관리 의식을 높이고 사용기간(내용년수)을 연장시켜서 반값공급에 의한 가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도 부품비 등 수리비의 일부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반값공급 과정을 통해 일선기관의 농업기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행정업무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선정에 있어서는 부락단위의 정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의 검토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농촌지도소에서는 160만 전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경영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 자료는 실수요자 선정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농기계의 이용특성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포장용 기계는 전업농가 중심으로, 육묘용 기계·시설, 건조용 기계·시설 또는 수확후처리 기계·시설 등 정치용 기계·시설은 이용조직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문화, 분업화 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정토론자 : 방진영(경기 화성군 기계화영농단 대표)】 : 농민들의 일손은 지역에 따라 바쁜 시기는 다르나 농기계의 힘을 빌려 일하는 시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작업 여건에 따라서는 소형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용 대형 농기계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농민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영농 계획을 세우고 농기계회사 제품의 성능과 장점, 단점, 가격을 알아본 다음 구입합니다. 그리고 영농 계획대로 구입한 농기계가 저렴한 수리비에 기대 이상으로 잘 돌아가 준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만족

한 흑자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영농실적 금액에서 기계값, 인건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유지비를 빼고도 적자면 농기계를 잘못 선택했거나 운영을 잘못된거죠. 농사도 장사고 사업인데 적자나면 되겠어요? 정부에서 기계화 영농단에 농기계 값의 50% 보조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구매 받지 않는 트랙터는 본체에 필요에 따라서 부속 작업을 연결하여 수도, 채소, 과수, 축산등 다목적으로 연중무휴 일할 수 있어서 농기계 활용면이나 투자가치에서 그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 특히, 일년에 10일~35일 사용하고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잠자고 다음해에 수리해서 다시 쓰는 단기성 농기계, 즉 이앙기, 콤팩트 같은 농기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한국 농촌 구조상 개인 농토가 분할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품종 통일이 안되어 한곳에서 계속 작업 여건이 안 이루어져 농기계를 이동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93년도에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고잔 들판 140만평에 품종을 통일하여 받은 이른 신양벼, 반은 늦은 품종 추청벼를 재배하는걸 봤습니다. 적은 농기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본보기이고 농약대 절감, 인건비 절약 등 이러한 단결에서 부터 UR 대응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농기계 회사에서도 UR 대처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민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농기계 회사마다 경쟁력으로 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선보이는 것은 질 좋은 농기계 생산을 위해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3년 사용하고 3년후 부터는 일량에 의해 소모되는 부속품과 고장에 의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구하지 못해 제때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겪은 고충이요, 불만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바램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때에는 농기계 수명을 가르키는 용자거치상환 기한까지는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같은 기종 생산회사간의 양보와 상호협조 아래 농기계 부속품을 통합 생산하셔서 부속품을 농민이 제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농기계를 수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하는 200만원 이하 농기계 반값공급은 환영하면서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이앙기의 경우 총 기계대금 1,825,000원 중에서 보조 91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용자를 원할 경우 용자는 14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보조금 912,500원을 뺀 나머지 487,500원은 용자 가능하나 작은 액수라 그런지 대부분 자부담으

로 912,500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또 경운기의 경우를 보면 농민들이 일년내 내 쓰는 농기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호도가 높고 농민들 인식에 뿌리박힌 상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농기계 선정을 해놓고 농번기에 구입을 못해도 기다렸다가 회사에서 생산한 다음 구입할 정도로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경운기 본체의 키 시동과 작업기를 모두 합하면 가격은 240만원 대가 됩니다. 그러나 보조는 100만원 까지이며 용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자한도 금액이 100만원 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 현찰로 내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 사정을 감안하면 이것 역시 나머지는 용자 아니면 추곡수매후 연말에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후된 기계도 엔진, 트레일러, 로타리 작업기 등 부분적인 교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엔진 하나 값에 조금 보태면 새로운 경운기 하나 사니까 구태여 부분적인 부품 교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대부분 포기하고 농기계 반값 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기회는 한번 밖에 안주어 지니까 한꺼번에 많은걸 선택하는거죠. 이에 대한 보완점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부품 엔진, 체대, 트레일러, 로타리등의 작업기에도 반값 공급을 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 순번에 넣지 않으면 농민은 수리하여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수리하여 쓰고, 필요한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선택한다면 특정 기계에 몰리는 현상과 재활용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여기 저기서 쓰레기로 변하는 새로운 농촌 공해도 덜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자 : 이상범 (화도 위탁영농회사 대표)】 : 반값공급은 현재와 같은 소규모 영농의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동 이용 조직이나 전업농 등을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업 특성에 맞도록, 예를 들면 평야지는 수도작, 기타 지역은 시설원예 또는 축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농기계의 구입 지원을 늘려야 하며, 국내 생산이 안되는 수입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자 : 천동렬(대동공업 공주 대리점)】 : 정부의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농기계 분야에 대한 반값보조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의 기대 구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지적하여 보면 첫째, 필요한 농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 공급계획 대비 요구 농민이 많으므로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나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필요한 농민이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 공동 보조사업 대상자의 한정 지연으로 기대 공급이 한철에 집중되므로 인해 생산 업체 및 대리점 모두가 적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연간 공급해야할 물량은 1~4월에 공급 해야 되고, 5월부터는 사후봉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에도 공급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 대상자 선정 확정 지연에 따라 용자실행 및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자금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물량 매입이 전년도 11월경부터 시작되어지고 보조금 집행은 94년의 경우 조속히 처리된 지방 행정기관이 5월이나 집행될 계획이나 지연되는 기관은 6월 이후에나 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농기계 반값 시행으로 지원 대상자 부락별 배정이 이루어져 수요자 조기 노출 현상 발생과 최일선 집행자인 이장의 기종 선정에 대한 입김이 커짐에 따라, 농협에서는 농기계 구입을 이장을 통하여 농협에서 구입토록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농협이 있는 면단위에서는 대리점에서 거의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 까지 놓여 있어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협에서는 대형 농기계는 A/S 능력 미비 및 부품확보 미비 등으로 대리점에서 구입하여도 무방하나, 소형 기종은 반드시 농협에서 구입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래 농협이 대형 시장을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대리점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A/S는 대리점에서 담당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의 공급확대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1. 당해년도 사업은 1월부터 공급 용자될 수 있도록 보조 대상자 확정 및 지역별, 기종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행정조치 바라며,
2. 반값 공급 방침 계속 여부 확정으로 안정적인 기대 구입을 유도하고,
3. 보조금 대상이 아닌 일반 구입자에 대해서도 용자로 기대 구입이 가능토록 조치바라며,
4. 신농정에 대한 농업기계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기대를 생산하여 공급토록 조치바라며,
5. 보조금 교부 지연이 없도록 행정조치 요망하며, 특히, 시.군에서 1/4분기부터 보조금이 집행토록 조치 요망하며,
6. 농협의 농기계 취급은 대리점의 A/S가 못미치는 오지 중심으로 설치하여 농기계 판매를 통한 이익 증대 목표가 아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내용중 93년도에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의 감소의 원인이 반값보조로 인한 소형기계의 증가보다는 전업농, 영농단 등의 수량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업농의 규모축소를 통한 수량증가 등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명토론자 : 류관희(서울대 농공학과 교수)】 : 두분 발표자 및 여러 토론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3일 한국농업기계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UR과 농업기계화"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저의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농업기계 반값 공급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소형기계뿐만 아니라 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 반값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값공급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이처럼 효율적인 농업기계

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저의 소견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반값공급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일부에서는 반값공급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장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반값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의 불만과 연관된 형평성 문제와 소형기계의 수요가 너무 많아 본래의 취지인 농업구조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값공급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값공급 약속의 파기는 그동안의 정부와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신을 고려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값공급정책의 시행은 정부와 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기계, 특히 동력경운기의 수요가 지나치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력경운기는 다른 소형기계인 관리기나 이앙기에 비하여 수도작의 경운정지는 물론 운반 등 여러가지 용도로 연중 이용되는 기계이므로 이의 수요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약 80만대가 보급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규수요가 아닌 대체수요도 많은 기종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형기계에 대한 과잉수요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형기계에 수요가 몰리는 큰 이유의 하나는 반값공급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불신에서도 야기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1997년까지 지속되며 거의 모든 농가가 반값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화성군청 농사계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따라 실제로는 읍·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연령, 경지규모, 기계 구입실적, 기계보유 등을 수치화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두

어 종합점수로 산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도 많이 줄어들고 탈락한 농가의 불만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또 1/4 분기에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일시에 기계인도를 요구하여 제작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자 선정시 기대공급 시기까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형기계, 즉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수율을 감안한 연도별 지원공급대수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값보조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 중에서 시급히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해 별도의 일반용자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 작업기 이외의 부속작업기도 농작업의 기계화를 앞당기고 본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반 용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중대형 농업기계의 보급촉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전업농의 적극적인 육성이 매우 필요한데 금년의 보조율 30%를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추가재원의 확보로 금년 하반기부터 5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반값공급을 실현하여 중대형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계화전업농의 자격기준이 50세 이하, 수도작의 경우 경지면적 1.5ha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판단입니다. 통계상으로 총경지면적이 2ha이상인 농가수가 전국적으로 176,000호인데 농가인구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50세 미만의 남자 인구의 비율이 4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논만을 1.5ha이상 소유하는 농가수는 8만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수도작 전업농을 50,000호까지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계화 영농을 해온 50세 이상 농가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50세를 55세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화전업농의 신청 및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경지면적의 규모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주장한 것이지만 수입 농업기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의 국산화는 결국 농가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농민들도 이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농업기계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율에 따라 정부의 지원율을 차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반값공급정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구입이 시급하나 반값공급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전액 자기부담으로 사야 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반값공급정책 시행전의 일반용자제도를 부활시키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책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명토론자 : 박동진 (농협중앙회 자제부장)】 :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상업농업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농업기계화사업 방향에 대하여 다시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계화사업과 농업구조개선 사업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불력의 대형화, 농업진흥 지역의 실정 등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농업구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기계 반값공급 등 농기계 보조지원 정책은 대형 농기계에 비하여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크게 늘고, 대형 농기계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농작업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지원액의 증가로 농업기계화 촉진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농가 부채의 증가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증가 이상의 농업생산 및 투자효율 향상을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조지원이 큰 공동이용 농기계 보조지원 정책에 있어서 구입 농기계 가

격의 일정율을 무조건 보조지원 할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 작업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투자 효율을 제고시키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라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하여 구입자금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력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 여론조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확보 등 정부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용자지원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대리점에서 오신 분이 농협의 농기계 공급사업 때문에 농기계 대리점에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농협의 농기계사업은 일반 상행위와는 달리 농기계 판매업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 농민 단체로써 수요자 농민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공동구매 행위이며, 따라서 농기계의 원활한 사후봉사를 공급자인 생산업체와 그 대리점에 요구하는 입장에 있으며,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의 사후봉사가 충분치 못한 현시점에서 농협은 농민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의 부당한 수리비와 부품 가격의 인상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써 막대한 운영손실을 감수하면서 농기계 서비스 센터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전 3사의 경우 제품의 구입경로에 관계없이 생산업체와 그 대리점 및 A/S센터에서 책임 사후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농기계도 공급자의 책임있는 원활한 사후봉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명토론자 : 임동규 (국제종합 고창대리점)】 : 첫째, 전업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규정에 전업농민의 연령을 50세 이하로 되어있지만, 현 실정으로 보아 농촌 인력이 고령화 현상이므로 60세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 자가소유 경지면적을 1.5ha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실

정으므로 보아 자기 소유경지 면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소유 경작지를 위임 받은 대단위 경영자가 많으므로 자기소유 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둘째, 농협과 농업기계 대리점 판매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기종)은 농협에서 관할토록 하고 위탁영농, 전업농가, 협업농(영농단) 등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해주신지, 공존 공생하는 화합 차원에서 농협과 농업기계 대리점의 비율판매 50%:50% 이라든지, 40%:60% 이라도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일반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 정부 농업기계 보조 정책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매년 한정되어 있어서 혜택을 입는 농가는 농사일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락자는 다음해를 기다리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자라도 받을 수 있으면 농가에 많은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명토론자 : 주우일 (농수축산신문 논설위원)】 :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변화상황으로 보아 농기계의 확대보급은 필수적이고, 한편 당행히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정부의 농어촌 지원자금도 당분간은 풍부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농기계 반값공급 공약이 모든 기종에 보편성 있게 확대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위성이 인정된다해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을 한 부문에 무작정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리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농정당국이 우선 총체적 안목에서 가능한 최대규모의 농기계 지원자금을 확보하고, 다음에 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현행 농기계 지원 시책은 많은 정부예산을 쓰면서도 역효과가 크다는 비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가 공약상의 『반값』 준수에 너무 엄매었기 때문으로, 따라서 명목상의 반값공급 공약 이행의 허울을 벗는데서 개선방안의 실마리가 찾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개선방안의 제1안으로 2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시 정부보조율은 30% 정도로 현재보다 하향조정하고, 대신 200만원이상 대형농기계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대형농기계 보급을 늘리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제2안은 아예 정부

보조정책을 없애거나 일부만 시행하고, 그래서 마련되는 잔액예산을 지급보증과 이차보상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민에게 자금용자를 해주고, 후일 이들 농민들이 이자 부담없이 분할상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농기계 자금을 농기계의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즉 농자재검사소 같은 공인기관이 농기계에 대한 연비, 국산화율, 생력화, 애프터 서비스 정도등 각종 세부기준을 세우고, 이를 점수화함으로써 농기계별 총계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농기계 자금 보조·용자비율을 이렇게 계산된 농기계점수와 연계하여 차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농기계일수록 보조나 용자금액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많이 보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명토론자 : 최성택(경기 화성군 기계화 전업농 대표)】 : UR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리라 생각됩니다. 기계화 전업농의 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50세 미만인 후계자가 있을 때, 자가 소유 농지 4,500평 이상, 경작 규모가 5ha 이상일 때 신청하여 선발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여건상 극히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93년 까지 현 선발기준에 의하여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 이외에는 극히 일부가 해당되나 우리 농촌의 실정상 50~60세대가 농촌의 주도적 노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도 이들 소유가 많은데 연령 제한에 의하여 전업농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 농기계 보급 이후 이들이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 전업농으로 선발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종 선택은 대형 트랙터와 콤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종은 1,200~2,000여만원의 고가의 기계로 생산비와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작에는 콤바인, 전작병행에는 트랙터를 선호하는데, 2ha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그 이전에 이러한 기종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나, 농기계 부채 상환 전에 다시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보조와 용자가 됨으로 이것이 농가 부채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시 보유 농기계 또는 부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작, 전작 위주의 농민에게 편중되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작목, 예를들면 과수, 화훼 또는 특수작목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경지면적 등의 제한으로 불리합니다. 또한 시판중인 농기계가 한정되어 과수나 기타의 작목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농기계 이용율이 낮은 기종에만 한하며,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로 가수요를 촉진시키므로 농가 부채만 가중시킵니다. 또한 농기계를 농업생산 기구에 포함시켜 부과세 등 각종 세재의 혜택을 주어 농기계 가격을 낮춤으로 농민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보급에 따르는 농작업의 연계가 안됩니다. 특히 기계 보급에 따른 약제개발과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작업 효율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이용율이 낮은 농기계일 수록 관리를 등한히 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스스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용율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